

F.B.I EXECUTIVE REPORT

ON GLOBAL BUSINESS AND ECONOMY





Contents May 09, 2012

Biweekly Report

- 2** Democracy Could Destroy the Euro
이창석, from TIME
- 4** Reasons Abound for Ebb in Job Growth
이예슬, from The New York Times
- 6** A Ban on Some Seafoods Has Fishermen Fumming
조경흠, from The New York Times
- 9** New Rivers of Gold
이건형, from The Economist
- 11** Nintendo Hurt by New Rivals
이용호, from The New York Times
- 13** Amazon vs. Publishers: The Book Battle Continues
임소연, from Bloomberg Businessweek

Cover Stories & Special Report

- 16** Geopolitical Weekly: Britain's Strategy
서준수, from STRATFOR
- 21** 「農民工」という言葉は過去のものに
현지훈, from Nikkei Business

Democracy Could Destroy the Euro

* 기사출처: [TIME \(2012.04.23\)](http://www.time.com/time/2012/04/23/)

* 요약자: 이창석 (laims2@hanyang.ac.kr)

* 키워드: 유로국가, 선거

“선거에 앞서 긴축재정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으로 난관에 봉착한 유로 국가들”



□ 지속적으로 고난을 겪어왔던 유로 국가들은 민주정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

- 아일랜드 금융위기에서부터 스페인 부동산 붕괴, 그리스 사태까지 고난이 계속되어 옴
- 이러한 시점에서 유로 국가들은 현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유로 국가들의 국민 여론은 유로통화시스템 유지를 위한 희생에 부정적인 입장
- 경제학자들은 강력한 정치와 이익을 추구하지만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는 유럽 경제구조의 '민주주의 결핍'에 대해 지적

-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체제는 지도층의 주도로 유지되어옴


□ 또한 경제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해온 현 지도층의 주도권이 약화되고 있음

- 선거를 앞둔 대부분의 유로 국가에서 유로 긴축정책을 지지하는 정당들의 패배가 예상됨
-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에서 유로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주도적인 한편, 재정적으로 안정된 국가에서는 재정위기 국가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

□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유로 국가들의 경우 좌, 우파 세력 모두 유로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프랑스의 극우파 마린 르펜은 국익에 반하는 유로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궁극적으로 자국통화로의 회귀를 주장하였으며, 극좌파 멜랑송은 긴축정책에 반대하고 유로존 국가들의 예산균형을 맞추기 위한 3월 협정을 강력히 비판
- 극우파와 극좌파의 지지도 상승으로 올랑드에게 유로화 정책에서 한 걸음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압박이 조금씩 가중되고 있는 상황
-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그리스 총선에서도 유로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표출되었는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긴축정책을 지지하는 사회주의당과 온건주의당 연합의 대패가 예상됨
 -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도 이와 같은 여론이 형성되는 추세를 보임

□ 그러나 유로 국가들이 유로존 탈퇴와 자국통화로의 회귀 조치를 취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유로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음

- 유로 국가들의 유로존 탈퇴는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국제통화기구 및 국가 정부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 유로 정책에 부정적인 여론은 유로사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선거를 앞둔 각국 정부가 유로사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행하기 곤란한 상태 

Reasons Abound for Ebb in Job Growth

* 기사출처: [The New York Times \(2012.05.04\)](#)

* 요약자: 이예슬 (butinane926@naver.com)

* 키워드: 미국, 고용 창출, 실업률

“미국의 낮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장의 미래”

□ 미국의 고용 창출은 올해 초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소식이라 할 수 있음

- 5월 4일 발표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고용주들은 올해 초 창출했던 일자리 수의 절반 정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4월에는 단지 115,555개의 고용 창출이 있었으며 이는 수많은 실업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줌

□ 이러한 가운데 실업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용 시장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

-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실업자들 중 다수가 경제활동인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데서 비롯됨
 - 일부 사람들은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세대가 한꺼번에 은퇴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 또한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길 원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간 수많은 젊은이들이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며 실업률이 감소
- 두 번째 이유는 이미 미국의 상당수 실업자들이 자의적으로 구직을 포기했다는 주장에서 비롯
 - 평균 39.1주라는 긴 실업 기간으로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
 - 그들은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시늉을 했을 뿐, 실상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지는 없었던 것


□ 정부도 사실상 고용 창출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해고시켜오고 있음
 - 경제 회복세 펀드가 고갈되고 주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수입 부족으로 고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은 지난 6분기 동안 감소세
 - 그러므로 공식적으로 경기 회복이 시작된 2009년 중순부터 공공기관은 일시적인 고용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인원을 감축해 옴

□ **정부가 큰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것에 더불어 기술 발달로 인해 더 적은 고용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속출**

- 오늘날 미국은 2007년에 공식적으로 경제 불황기가 시작되었을 때 제공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지만 노동자 수는 5백만 명 정도가 더 적음
- 고용주들이 더 적은 수의 노동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동 효율성을 극대화 해왔기 때문임

□ **그러나 현 상황이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노동시장에 관해서 선불리 비관적인 판단을 내려서는 안될 것**

- 기술 발달로 인해 노동 비용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 때에는 도리어 생산성이 감소
 - 고용주들이 보유중인 현재 노동력으로부터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상, 이는 일자리가 없는 미국인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음
- 몇몇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가 반드시 부진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미국의 노동시장을 선불리 부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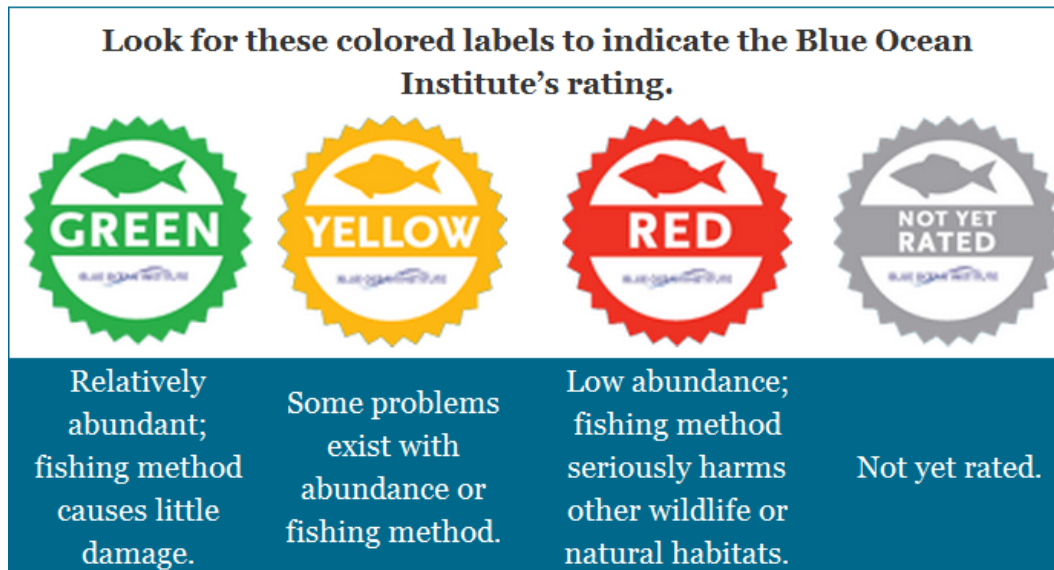
A Ban on Some Seafoods Has Fishermen Fumming

* 기사출처: [The New York Times \(2012.04.21\)](http://www.nytimes.com/2012/04/21/us/politics/whole-foods-ban-on-seafood.html)

* 요약자: 조경흠 (polarbear5@hanyang.ac.kr)

* 키워드: **홀푸드, 트롤선, 수산업 규제**

“수산업 규제정책으로 인한 미국 식품유통업체와 어민들과의 갈등”



□ 미국의 식품유통업체 홀푸드(Whole Foods)는 트롤선을 통해 잡은 뉴잉글랜드산 대구에 대한 판매 불허 정책을 제시

- 트롤선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다 표면을 따라 그물을 끌어 어업을 함
- 이 방법을 사용하면 생선의 크기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류를 포획할 수 있게 됨

□ 홀푸드는 이 정책이 과도한 어획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고갈되어 가는 해양자원 회복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강조

- 홀푸드의 구매담당 David Pilat은 해양자원의 관리가 고객과 회사 모두에 중요하다고 역설
- 스톤이 브룩 대학교의 해양 보존 과학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홀푸드의 정책에 적

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 **홀푸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산물에 각각 등급을 부여해 판매하려 계획 중**

- 각각의 등급은 보호단체인 Blue Ocean Institute와 The Monterey Bay Aquarium에서 만든 것으로 어종의 다양성, 번식력, 어획 방법이 서식지에 피해를 주는지 등을 바탕으로 책정됨
- 내년부터 적색 등급(Red-rated)에 속하는 생선 판매를 중단하려 했으나 그 기한을 앞당김
 - 이미 상어, 참치 등 몇몇 어류는 판매가 중지됨

□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 뉴잉글랜드 지역 어민들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음**

- 홀푸드의 정책은 단지 마케팅 수단일 뿐이며 수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말은 겉은 그럴싸하지만 결국 어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발에 나섬
- 하지만 홀푸드 이외의 유통업체들도 이에 대응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
 - Wholesales Club은 지속가능성이 확인되었거나 2014년까지 지속가능성장 기준을 만족시킬 계획을 가진 공급자가 제공하는 수산물만을 판매할 계획을 밝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이런 유통업체들의 움직임이 결국 기업의 사익추구를 위한 것이라 봄

□ **홀푸드의 트롤선이 아닌 자망(gillnets)이나 낚시를 이용해 잡은 수산물의 판매는 유지하는 것에 대해 어민들은 반발적인 의문을 제기**

- 자망의 경우 해양포유류들이 그물에 엉키고, 기준 이하 크기의 생선까지 모두 잡아버리는 방법이기 때문
- 최근 미 연방 규제기관은 많은 돌고래가 자망에 엉켜 죽어가고 있어서 일부 지역에 자망 어업을 금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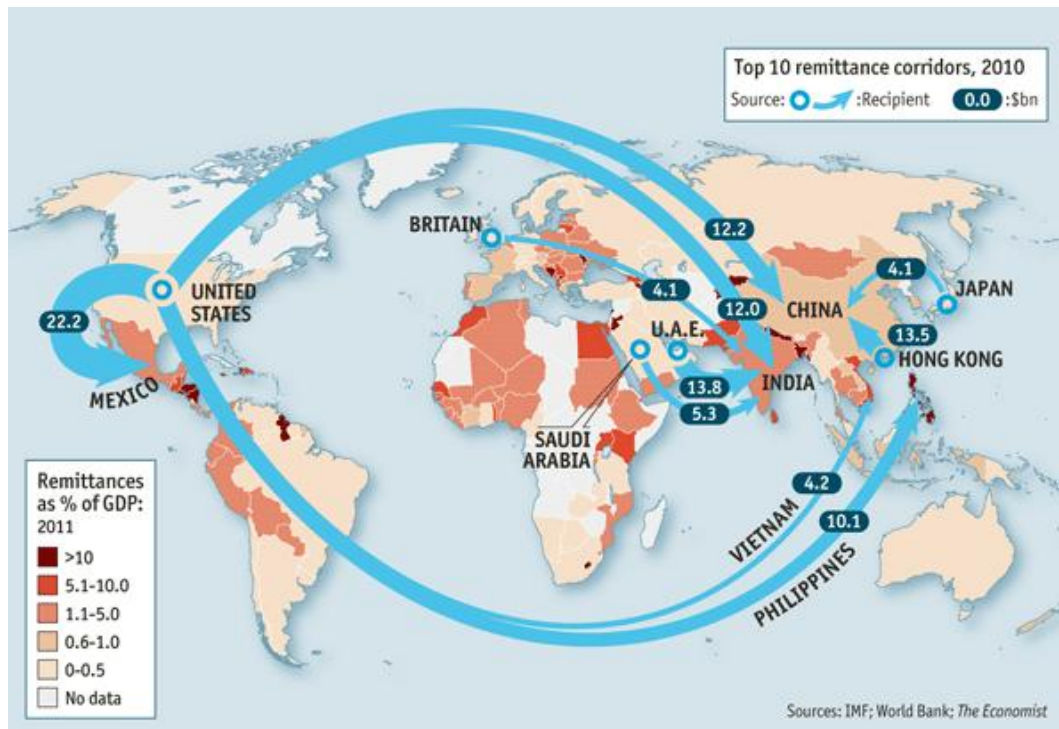
- 어민들은 결국 어떤 방법이든 피해를 주지 않는 어업 방법은 없다고 주장하며 유통업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비판 **FBI**

New Rivers of Gold

* 기사출처: [The Economist \(2012.04.28\)](#)

* 요약자: 이건형 (john5510@hanyang.ac.kr) * 키워드: 빈곤국가, 송금액, 이주 노동자

“경기 침체국가들을 돕는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



□ 최근 빈곤 국가로 유입되는 송금액이 증가하는 추세

- 빈곤 국가로의 송금은 상당한 가치를 지니는데, 2011년 총 송금액은 3,720억 달러로 이는 빈곤 국가로의 직접투자 규모와 비슷한 수준
- 송금액 규모는 2000년 대비 네 배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경제위기 당시 약 5%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다시 회복세

□ 데이터의 발전으로 인해 송금액 및 송금 국가의 다양성이 증대됨


-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Western Union이나 MoneyGram과 같은 업체들은 중앙은행으로의 보고체계를 발전시켜 옴

- 특히 9.11 테러 이후 더욱 철저해진 관리감독은 송금 증가의 원동력이 됨
 - 나이지리아는 2007년 당시 전년 대비 두 배에 가까운 송금수령액을 기록
- 또한 현재 빈곤 국가들은 미국 뿐만 아니라 걸프만 지역과 같이 이전보다 다양한 국가로부터 송금을 수령

□ 주요 송금 국가 중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는 걸프만 지역으로, 이 지역으로의 이주 노동자 유입이 송금액 증가에 기여

- 중동지역의 국가들은 오일 붐 이후 이주 노동자들을 급격히 유입함에 따라 이 지역으로부터의 송금액은 증가세를 보임
 - 2010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남부아시아, 아프리카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270억 달러의 송금액을 기록
- 걸프만 지역에서 빈곤 국가로 송금하는 금액은 서유럽인들이 전 세계로 송금하는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

□ 경기 변동에 취약한 송금의 특성은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 흐름에 영향을 미침

- 멕시코의 경우 작년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는데 이는 불안정한 미국의 건설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멕시코의 이주 노동자가 많기 때문
- 통화의 변동은 송금 패턴의 왜곡을 야기
 - 화폐의 가치가 평가절상된 아프리카에서 달러나 유로화의 수요 감소를 초래하며, 이에 따라 송금되는 달러는 송금 수령국가에서 가치가 하락됨
- 강화된 국경 통제 또한 송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침
 - 선진국들은 이민의 문턱을 높이는 추세며, 이는 이민의 감소로 이어짐
 - 반면 노동자들은 더 오래 머무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송금 흐름에 영향을 줌 

Nintendo Hurt by New Rivals

* 기사출처: [The New York Times \(2012.04.26\)](#)

* 요약자: 이용호 (leetro@hanyang.ac.kr)

* 키워드: 스마트폰, 태블릿PC, 닌텐도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장에 따른 닌텐도의 위기”

□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등장으로 닌텐도의 콘솔게임 시장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닌텐도는 2006년 Wii의 성공으로 콘솔게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등장으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음
 - 2011년 실제 판매량은 예상보다 부진했으며 2012년 3월 말 회계연도에서 373억 엔의 적자를 보고
 - 반면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를 기반으로 과거 닌텐도가 점유하고 있던 게임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 CLSA의 한 분석가는 닌텐도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발중인 Wii U의 시장가격을 350달러로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
 - 이 가격은 2006년도 Wii의 가격보다 100달러 더 비싸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3와 MS의 Xbox360보다 50달러 정도 비싼 가격으로 가격경쟁력이 부족

Wii

2007년 9월, 일본 주식시장에서 닌텐도가 도요타 자동차에 이어 전체 2위의 시가총액을 가지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임기이다. 이제껏 없었던 컨트롤러와 그 사용 방식, 한 때 판매했던 게임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판매, 게임 이외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 탑재, 인터넷을 활용한 풍부한 기능, 서비스 등이 Wii의 주요 특징이다. 위의 특징에서 볼 수 있듯이, Wii는 처리능력 및 화면 표현력의 향상 면에서 같은 시기의 경쟁 기종인 플레이스테이션3나 Xbox360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띠고 있다.

출처: 위키백과

□ 닌텐도는 신제품 개발과 기존 제품의 가격차별화 전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함

- 닌텐도는 차후 Wii의 후속모델 Wii U를 출시할 예정이며 이 제품은 플레이스테이션, Xbox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
- 또한 가격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모델 3DS의 가격을 1/3 수준으로 낮추었

으며 올해 1,850만 개의 판매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닌텐도가 처한 위기는 소비자들의 게임습관이 변화했기 때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게임 콘텐츠를 활용한 수익모델이 필요

-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소비자들의 게임습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옴
 - MocoSpace가 1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3%가 침대 위, 41%가 거실, 72%가 통근 중에, 5%가 화장실에서 게임을 한다고 답변
-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게임은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닌텐도의 게임은 시간과 장소의 영향을 크게 받음
 - 예를 들어 Wii로 즐길 수 있는 게임 콘텐츠와 DS로 즐길 수 있는 게임 콘텐츠는 서로 연동이 불가능
- 하드웨어 시장을 축소하고 콘텐츠를 활용한 수익모델 구성이 필요
 - 닌텐도는 현재의 변화에 대응하여 슈퍼마리오 같은 인기 있는 게임 콘텐츠를 닌텐도의 게임기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도 실행할 수 있도록 전략을 변경해야 할 것 **FBI**

Amazon vs. Publishers: The Book Battle Continues

* 기사출처: [Bloomberg Businessweek \(2012.04.26\)](#)

* 요약자: 임소연 (cian92@hanyang.ac.kr)

* 키워드: 주문형 도서출판, 아마존

“주문형 도서출판을 둘러싼 아마존과 출판사들 간의 갈등”



□ 아마존은 주문형 도서 출판을 통한 책 판매를 추진 중

- 종이 책을 선호하는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창고에 저장되는 재고 도서들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
- 따로 재고를 저장할 필요가 없기에 회사로서는 효율성 증진이라는 장점을 가짐

주문형 도서 출판 (POD, Print On Demand)

주문을 받은 후에 책을 즉석에서 인쇄하는 방식이다. 과거 전통적인 인쇄방식으로는 주문형 출판이 경제적이지 못하므로, 디지털 인쇄방식이 시작된 이후 발전하게 되었다. 원하는 수량만큼 출판이 가능하므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고 다품종 소량 인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재고가 다 떨어진 오래된 책을 재판해야 될 때나 시험마케팅을 해야 하는 경우 등에서 이러한 주문형 출판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위키백과

□ 주문형 도서 출판은 아마존이 처음 시도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십여 년 전부터 다른 기업들이 사용해왔던 출판 방식임

- 1997년, 미국에서 가장 큰 도서 도매업체인 잉그램 콘텐츠 그룹에서 최초로 도입
- On Demand Books의 경우, 주문형 출판 방식을 통해 주요 서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책을 파악해 이를 제작할 수 있는 기계를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음
- 아마존은 주문형 출판 기업인 BookSurge를 인수하여 CreateSpace라는 자회사를 탄생시켰고, 중소 출판사들과 책을 직접 출판하고자 하는 저자들을 대상으로 주문형 출판방식 서비스를 제공

□ 그러나 아마존이 주문형 도서 출판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책의 저작권 사용 허가 요청을 하자 출판업계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나섬

- 재고가 부족할 때만 주문형 출판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이미 인쇄된 단행본의 판매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 출판업계는 판단
- 대형 출판업체들은 도서 인쇄에서부터 저장, 배송까지 모두 직접 담당하는데, 주문형 도서출판 방식을 채택할 경우 단행본 공급과정의 단순화로 인해 도서 가격 인하가 불가피해질 것

□ 또한 출판업체들에게는 아마존에 대한 견제 심리가 존재하여 주문형 출판 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려 함

- 출판업체들은 아마존이 출판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기회를 노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백 년간 이어온 비즈니스 모델을 망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우려
 - 아마존이 킨들을 출시한 이후 전자책을 9.99달러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출판사들의 반발을 산 사례가 있음
- 경쟁사 반스앤드노블이 있는 전자책 시장과는 달리 주문형 출판 시장은 유력한 타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아마존이 독점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주문형 출판방식은 비용 절감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방식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일반 단행본과의 기술적인 차이는 미미한 수준
- 재고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서점에서 팔리지 않는 도서들을 환불할 경우 출판사가 부담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음

□ **출판사들의 반발과 초기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주문형 출판 방식은 수많은 장점들이 단점들을 상쇄하게 될 것**

- 주문형 출판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출판사들이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초기 비용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존재
- 하지만 재고 저장 등으로 쓰여왔던 비용을 연구 개발에만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득이 될 것 **FBI**

Geopolitical Weekly: Britain's Strategy

* 기사출처: [STRATFOR \(2012.05.07\)](#)

* 요약자: 서준수 (timextractor@gmail.com)

* 키워드: **영국의 전략, 미국, 유럽**

“영국 지정학적 전략의 변천사와 미-유럽 사이의 균형전략”



□ **과거 대영제국의 전성기는 나폴레옹의 패배로 인해 의도치 않게 주어졌던 것**

- 영국은 1939 년 기준 세계인구의 1/5 과 지구상 면적의 1/4 을 지배했음
-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해상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이것이 19세기 전세계 패권의 열쇠가 됨
 - 트라팔가르와 워털루에서의 승리는 해상 경쟁자였던 프랑스를 제거시킴
 - 인도와 태평양으로 향하는 무역 루트를 독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됨
 - 이 기회는 영국의 정치, 군사력에서의 지배력만이 아니라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산업혁명의 선도자 역할에도 영향을 줌
- 나폴레옹에 의한 유럽 대륙의 황폐화, 프랑스의 약화와 미국의 미개척 상태는 영국이 국제적으로 부상하게 되는 종합적인 기회로 작용

□ **대영제국은 일류 무역지대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운영방식은 상호 경제적, 정치적 이익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차이를 보임**

- 원재료와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던 영국은 무역관계에 대한 잠재적 적을 통합함으로써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해 건설된 식민지는 제국의 안보를 강화시킴
- 제국의 형태에서 영국은 나치 독일보다는 로마 제국을 닮았음
 - 로마제국은 식민 사업에서 핵심그룹들이 그 관계로부터 큰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각국에 다소 자발적 의지를 부여
 - 그러므로 로마제국은 제국이었던 것만큼이나 동맹국이기도 했음
 - 이와 대조적으로 나치 독일은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결과로서 피지배 국가들과 순전히 착취적인 관계를 형성
- 군사적인 위협이 없던 시기적 상황도 영국이 독일과는 다른 행방을 걷게 한 요인으로 작용
 - 나폴레옹 전쟁이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힘을 불구상태로 만들었음
 - 따라서 굳이 전쟁을 위한 착취관계를 만들 일이 없었음

□ **19세기 말 독일의 통합과 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미국으로의 자본유출은 영국의 전성기의 끝을 예고**

- 1871년 독일이 통합되자,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대국이 되었고 영국

경제를 위협하기에 이름

- 경제적 주도권을 두고 경쟁할 필요가 없던 영국에게 독일의 부상은 영국의 상품을 염가경쟁으로 내몰았음
- 영국의 산업화가 진행되며 모순적이게도 자국에서 보다 높은 수익을 모색하던 영국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를 시작
 - 그렇게 시작된 미국 산업은 영국 해군을 압도하게 될 미 해군의 기반이 됨
- 나폴레옹의 격파로 인해 열렸던 기회의 창은 영국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압박으로 막을 내리게 됨

□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 영국의 주도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

- 전쟁에서 발생한 막대한 비용은 영국 경제를 침식시켰고, 결과적으로 영 제국의 국가간 구조에서 변화를 유발
- 영국의 제국주의로부터 이득을 취하지 못했던 국가들 사이에서 영국의 힘이 의심받기 시작
 - 영 제국의 약화는 제국 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소 상호 의존적으로 변화시킴
 - 제국의 치안유지 비용이 그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졌음
- 미국이 제국의 일부 국가들에게 잠재적인 대체 파트너로서 부상하게 됨

□ 세계 2차 대전을 겪고 영국은 결정적으로 미국에게 세계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영국의 전략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제국의 지분을 미국에 넘기는 것으로 수정됨

- 영국이 전쟁에서 진 것은 독일만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진 것이었음
 - 미국은 스스로의 이익을 취하며, 영국을 독일과의 합의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구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의 힘의 균형은 전쟁 기간 동안 완전히 변화
- 영국은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보다 어마어마하게 뒤처지게 되었고 영국은 제국의 유지 능력을 미국에 의존하게 됨

- 전쟁의 끝에서 영국의 전략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며 제국의 지분을 미국이 인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었지만 미국은 이것에 관심이 없었음
 - 냉전으로 알려지게 된, 소비에트를 봉쇄하는 것을 우선적인 전략적 이익으로 보았음
 - 미 정부는 제국의 형태가 반(反)서구 감정 등을 불러일으켜 이러한 전략에 방해가 될 것으로 염두

□ **영국은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위를 인정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부관 전략 (lieutenant strategy)'을 목표로 삼게 됨**


- 영국은 제국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인정했고 그 대안으로 미국과 독특한 동맹관계를 형성하였는데, 그 핵심은 영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자 2인자 역할을 수행하는 '부관 전략'에 있었음
 - 영국은 미국과 동등해질 수 없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숫자와 기술적인 세련도에서 앞서는 군사력을 행사하며 사실상 미국의 부관이 될 수 있음
 - 미군보다는 작지만, 다른 미 동맹군보다는 좀 더 해외에서 유능함
- 이러한 목표는 단순한 또 다른 미국의 동맹이 아닌 종속적인 포지션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음
 - 영국은 다른 동맹국은 받지 못한 특별한 양보와 배려를 얻어내기 위해 그러한 관계를 이용했음
 - 또한 그들은 다른 국가가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음
- 결국 자국의 이익에 따라 미군의 사용을 유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반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음
 - 포클랜드 제도에서 벌어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전쟁에서 미 정부는 그 성패에 대해 어떤 이익관계도 없었지만 영국의 이익이란 측면에서 미국은 영국을 도울 수밖에 없었음

□ **하지만 이러한 관계에서 영국으로서는 군사 유지비용 및 자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잠재된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서 균형 전략을 고려**

- 영국이 곤경에 처했을 때는 미국과의 관계로 인한 이익이 극대화되지만 평상시에는 비용이 이익을 초과하기 쉬우며, 미국에 깊게 관여될 경우 그들의 자주권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영국은 대륙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미국과 유럽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략을 조정
 - 두 가지 측면 모두 비용이 드는 것이지만, 영국은 양측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존성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선택권을 보유하게 됨
 - 유럽이 그 통합을 증대해나가며, 영국은 유럽에 참가하였으나 유로존에 참여하지 않았음
 -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지만 영국은 참가했음
 - 동시에 프랑스는 리비아에 개입하기를 원했고 미국은 그것을 극도로 꺼려했지만, 영국은 프랑스에 참여했고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냈음

□ **영국은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취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자 하며 그들이 기다리는 모든 시간 동안 대안을 열어두고 어떻게 게임을 전개해나갈지 관망하고 그 환경의 변화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에 위치시키려 할 것**

- 만약 유럽 연합이 실패하고 유럽 국민국가들이 기본적 체제로 다시 출현할 경우, 영국은 유럽의 분열을 그들 스스로의 경제적, 정치적 이점으로 취할 것이고 그 전략을 위해 미국을 이용할 수 있음
- 만약 미국이 곤란에 처하고 유럽이 좀더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영국은 영국과 그들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음
- 미국의 가장 신뢰 있는 동맹으로 남아있는 전략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영국은 유럽 연합에서 깊게 관여하며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
 - 그것은 영국이 자칫 균형을 잃을 경우 위험한 길이 되지만, 영국으로서는 지난 세기에 배웠듯이 안전한 길이란 없음
 - 대신에 영국은 역사에서 다음 변화를 기다리고 시간을 벌고자 할 것 

「農民工」という言葉は過去のものに

* 기사출처: [Nikkei Business \(2012.04.26\)](#)

* 요약자: 현지윤 (ozma@hanyang.ac.kr)

* 키워드: 중국, 이원통치, 농민공

“중국 국가정책과 노동자 권리의식 신장에 따른 비즈니스 를 변화”



□ 과거 중국 경제의 기적적인 급성장은 ‘노동력 염가 정책’의 성공 덕분이었으나, 경쟁력을 서서히 잃어가는 추세

- 중국 정부의 성장 전략이 세계 경제흐름과 부합해 중국 급성장을 주도
 - 1970년대 말 중국 정부의 개방개혁 당시, 팔 수 있었던 자원은 저렴한 토지와 노동력 뿐이었음
 - 전세계에 토지와 노동력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이 탈(脫)국경화를 향한 세계 경제 흐름과 맞아떨어지면서 고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
- 그러나 토지와 노동력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면서 핵심 성장요인이 변화

□ 노동력의 여가판매를 가능하게 했던 '이원통치 시스템'은 많은 사회적 문제와 모순을 낳음

- 이원통치 시스템은 싸고 풍부한 중국 노동력의 바탕이었으나, 여러 사회 문제와 구조적 모순을 내포
 - 농촌 주민 8억여 명은 '이등 국민'으로 차별당하고 교육, 사회보장, 재산권 등 기본권에서조차 불이익을 받음
 - 도시에서 외부인 처지인 농민공들은 권리를 내세울 수 없는 위치라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에 순응

이원통치 시스템

국가를 도시부와 농촌부로 나누어 사실상의 국경을 만들고, 농촌을 발판 삼아 도시 발전을 꾀하는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국민을 농업호적과 비농업호적으로 구분하고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농민을 농촌에 구속시켰다. 중국은 계획경제에 기반해 농촌 생산물을 일괄매입·판매하고 도시 생산품에 이익을 붙여 농촌에 판매해, 그 차익은 중공업 분야에 투자했다.

원칙적으로 농촌 출신자의 도시노동은 금지되어 있었으나, 도시부 인력부족 때문에 '잠주증(暫住証)'을 발행해 이들의 임시적 도시체류를 허용했다. 잠주증을 발급받아 임시로 도시에서 근로하는 농촌 출신자들을 '농민공(農民工)'이라고 한다. 낮은 임금을 받은 농민공은 중국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 그러나 2003년 후진타오 정권 이후 정책 테마가 농민의 시민화로 변하면서 '이원통치 시스템'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으며 지역적으로 영주권을 인정하는 거주증을 발행하기 시작

- 국가가 부흥하며 세수가 늘자 이원통치 시스템이 오히려 농촌과 도시 간 격차를 벌이며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여 농촌의 도시화를 표방한 정책 개혁을 펼침
 - 이에 따라 농민과 시민의 경계가 희미해짐
- 또한 임시 체류 허가증이었던 잠주증을 폐지하고 영주권을 인정하는 거주증을 발행하는 지역이 증가
 - 납세, 직업경력, 고정된 주거, 전과 유무 등의 조건 심사를 통과한 농촌 출신자들에게 거주증을 발행
 - 이 제도는 이주 희망자가 매우 많은 초대형 도시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

□ **점차적으로 거주증을 얻은 농촌 출신 노동자들의 발언권과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사회적 위치 또한 변화**

- 사회제도 변화로 농촌 출신 노동자들은 평등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도시 주민이 됨
 - 영주권은 농촌 출신자들이 도시에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그들의 권리의식을 향상시킴
- 현 상황에서 '농민공'이라는 단어는 법적,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으로, 법적 자격을 가지고 도시부에서 근로하는 농촌 출신 노동자들은 이미 농민이라고 볼 수 없음

□ **이에 따라 중국 내 외국계 기업의 인사제도 역시 노동력 중심에서 인재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농촌부에서도 고학력자와 IT 기술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등장함에 따라 이들의 의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사제도 구축이 필요
- 또한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간 인사제도의 경계를 허물고, 노동자 개인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인재로 대우하며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배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
- 따라서 농민의 시민화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기업 발전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발상이 관건
 - 중국의 임금 상승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기업은 해외에서 성장할 수 없으며, '노동력 염가판매 시대'가 끝나가는 현 시점이야말로 승부의 전환점이 될 것임
 - 임금 액면가 자체가 아니라, 그 임금으로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어야 미래 중국에서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 

FBI는 한양대 경영대학의 비상업적 지식봉사 동아리로,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경영 이슈에 대한 교내 상호 학습을 위해 동아리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외 지식봉사차원에서 무상으로 공유하고는 있으나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보고서 구독신청 및 변경 (fbi.hanyang@gmail.com)

Advisor: 이웅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victory@hanyang.ac.kr)

Editor in Chief: 김한결 (hankkim87@daum.net)

Associate Editor: 박나현 (nh313131@hanyang.ac.kr)

Copy Editor: 김박훈 (pacman903@daum.net), 이일희 (asahi8769@gmail.com), 정지인(jiin.chung4542@gmail.com)